

진짜 대한민국! 중앙선대위 노동존중선거대책위원회

보도자료

문의	노동국	연락처	02-6788-3619	e-mail	petssy1212@inochong.org
	백세시대소득보장실천단		박주현 010-9966-6005		

“한국노총, 초고령사회 대응의 새로운 전환점을 이끌어가자!” 백세시대소득보장실천단 정책협약 및 고령사회 대응 토론회 개최

노동존중선대위, “백세시대 소득보장 실천단” 정책협약 및 지지선언 개최

한국노총은 제21대 대선을 준비하고 노동존중사회 구축을 위해, 더불어민주당 노동존중선거대책위원회(노동존중선대위)와 의제별 실천단을 구성해 정책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해당 활동의 일환으로 한국노총 현장 정책위원과 더불어민주당 노동존중선대위는 5/22(목) 오후 1시 50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고령사회를 대비한 “백세시대 소득보장 실천단” 정책협약 및 지지선언을 진행했다. 해당 행사에는 백세시대소득보장실천단 책임의원인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과 한국노총 현장 정책위원 “우문현답(우리의 문제, 현장에 답이 있다)” 13인이 참석했다.

협약서에는 양측이 선거기간과 향후 공동사업으로 노력할 백세시대에 대비한 정년연장, 고령자 고용안정 및 촉진을 위한 고용서비스 정책,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국민연금과 퇴직연금 정책이 담겼다. 주요 내용은 ▲2025년 내 65세 정년연장 입법 추진 ▲고령자 재취업지원과 교육훈련 강화 ▲공적연금 강화 및 국가역할 확대 ▲퇴직급여제도 확대 적용 등이 있다. 아울러 양측은 신-구 연금 분리 등 공적연금 본연의 기능을 훼손하고 세대간 갈등을 조장하는 정책에 대해 강력하게 반대하겠다는 의지도 드러냈다. 협약서에는 서영석 실천단장과 오상훈 한국노총 현장 정책위원이 대표

로 서명했다.

서영석 실천단장은 인사말에서 “국민의 노후가 빈곤과 단절이 아닌, 존엄과 연대로 이어지도록, 오늘의 정책협약이 든든한 시작점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하며, “백세 시대 소득보장 실천단장으로서, 고령사회 대응 및 사회보장을 위한 정책과제들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제대로 된 입법과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오상훈 한국노총 현장 정책위원은 “생산가능인구 축소, 노인빈곤 심화라는 예견된 미래에 대응하기 위한 결단이 필요하다”며, “재고용 방식의 정년연장, 국민연금을 축소하는 각종 제도개악 등 시대착오적 정책에 과감히 반대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노동자들이 평생 일해 온 일자리에서 안전하게 노후를 맞이하도록 정책협약 내용을 근거로 강력한 현장의 지지를 보낼 것”을 약속했다.

실천단은 정책협약 내용을 토대로 백세시대 소득보장을 위한 선거기간 여론활동 및 향후 공동사업을 적극적으로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

『초고령사회, 노후소득 공백 해결을 위한 정년연장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 개최

지난 8일 경사노위 「인구구조 변화 대응 계속고용위원회」가 ‘고령자 계속고용의무 제도화에 관한 공익위원 제언안’을 발표했다. 이번 공익위원 안은 법정 정년을 60세로 고정하고, 노사의 자율적 합의가 없거나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 사업주의 재량으로 새로운 근로계약 체결을 통해 고용형태를 달리하여 계속고용을 의무화한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이렇게 되면 약한 수준에서의 고령자의 고용안정은 담보할 수 있지만 임금, 복지 등의 노동조건 크게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 지금도 고령자의 임시·일용직 비율이 매우 높은 수준인데 이를 더 강화하는 기제로 갈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은 한계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이에 한국노총은 5월 22일(목) 오후 3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민주노총과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 박해철 의원, 박홍배 의원, 서영석 의원과 공동으로 ‘초고령사회, 노후소득 공백 해결을 위한 정년연장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토론회

를 개최했다.

한국노총 류기섭 사무총장은 인사말을 통해 “정년연장과 국민연금 제도 간의 불일치로 발생하는 소득절벽 해소 문제는 시대적 과제로 차기 정부에서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퇴직 후 재고용에 방점을 찍은 고령자 계속고용의무화안은 고숙련 노동자의 임금과 복지, 퇴직금 등 노동조건을 하향시키는 제도로 악용될 것”이라며 “이 제도가 활성화되면 법정 정년연장은 완전히 무력화시키는 것이나 다름없다고”고 강조했다.

주제발표에서 정흥준 교수는 “경사노위 공익위원안은 △노조 유무와 기업의 지불 능력에 따른 정년의 이중구조 문제 △임금에 대한 내용의 모호성 △청년 일자리에 대한 소극적 대안 △직종·직군별 차별적 정년제도 도입시 근로자대표제도의 모호함 △노사 합의 없는 공익위원 제언이라는 점에서 한계점이 있다”고 밝혔다

정 교수는 정년연장에 대한 방향에 대해서는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나이까지 일할 권리 보장이 필요하다”면서 “모든 노동자에게 정년까지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동등하게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정년은 기존처럼 60세로 두고 정년연장, 직무유지형, 자율선택형 등을 통해 고용을 연장하는 것은 오히려 노사 간의 불필요한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고 우려감을 나타냈다. 그 밖에도 △노조의 임금에 대한 열린 자세 △노동자의 일에 대한 태도 △고용에 대한 대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과 대기업 주도의 산업정책에 대한 정부 협력과 중도 퇴직자나 비정규직 대상으로 한 적극적 고용서비스 확대 등에 대한 정부 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한국노총 유정엽 정책본부장은 계속고용의무제도의 문제점으로 “재고용과정에서 연령차별을 법적으로 허용하는 방식이며, 비용 절감과 이윤을 최우선시 하는 기업입장에서 정년연장을 선택할 이유나 동기를 갖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대기업과 공공기관의 경우 전직 등을 계속고용의무조치를 이행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한 것은 연령차별을 피해가기 위한 꼼수를 합법으로 둔갑시킨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공익위원이 제안한 계속고용의무 적용시기는 2027년까지는 유예한 후 2028년부터 2031년까지 2년마다 1년씩 정년을 상향한다는 점에서 여전히 1~3년의 소득공백 문제를 안고 있다”고 주장하고, “정년연장은 숙련과 경험의 차이로 직무성격의 차이가 있으므로 청년 고용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한정적일 것”이라며 “세대 간 갈등적 접근이 아닌 대안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날 토론회는 중앙대 이병훈 명예교수의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L-ESG 평가연구원장, 유정엽 한국노총 정책1본부 본부장, 이정희 민주노총 실장, 황문찬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활동가, 고현종 노년유니온 위원장이 토론자로 참여해 각계각층의 이해당사자의 입장과 견해를 토대로 풍부한 토론을 진행했다. /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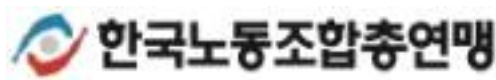
붙임 : 1. 백세시대소득보장실천단 정책협약서 1부.
2. 현장사진 1부. 끝.

민주당 21대 대선 정책협약서

한국노총과 제21대 대통령선거 더불어민주당은 21대 대선승리를 위한 노동존중선거대책 위원회에 고령사회를 대비한 “백세시대 소득보장 실천단”을 설치하고 아래의 정책을 선거기간 여론활동과 이후 공동사업으로 적극 전개한다.

1. 국민연금 수급 연령과 법정 정년의 차이로 인한 소득공백 해소,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노동시장 문제, 노년부양비 급증 문제 해소를 위하여 연금 수급 연령과 연계한 65세 정년연장을 노사 등과의 논의 및 협의를 거쳐 2025년 내 정기국회에서 입법을 추진한다.
2. 고령자의 주된 일자리에서의 고용촉진과 고용안정을 강화하기 위해 고령자고용안정지원금 확대, 고령자의 재취업지원과 교육훈련 강화 관련 제도와 인프라를 내실화한다.
3. 노인 빈곤 해소와 국민의 존엄한 노후를 위해 국민연금 소득보장기능 강화 및 국가 역할 확대 등 공적연금을 강화하고, 신-구 연금 분리 등 공적연금 본연의 기능을 훼손하는 정책에 대해 반대의 입장을 견지한다.
4.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와 가입기간 연장을 위해 저소득 가입자 보험료 지원, 출산 및 군복무 크레딧 확대, 청년층을 위한 생애 최초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제도 등을 국고를 통해 시행한다.
5. 적절한 수준의 노후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퇴직급여제도를 1년 미만 노동자에게 확대 적용,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100인 이하 확대 적용 및 운용관리수수료 면제, 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화, 수수료 상한제, 수익률 제고 등을 추진한다.

2025년 5월 22일



100인 현장 정책위원
대 표 오 상 훈

더불어
민주당
백세시대 소득보장 실천단
단 장 서 영 석

※ 첨부: 현장 사진



▲ “백세시대 소득보장 실천단” 정책협약 및 지지선언



▲ 『초고령사회, 노후소득 공백 해결을 위한 정년연장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